

제11장: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의 배경⁵⁾

1) 위기의 내용

- 위기의 증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1970년 대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

〈표〉 1960-1981년 OECD 국가들의 거시경제지표(단위 %)

경제적 지표	1960-1973	1973-1981
실업률	3.2	5.5
인플레이션	3.9	10.4
GNP 성장률	4.9	2.4
생산성 성장률	3.9	1.4

출처: 복지국가론, 250 재인용.

(1) 사회복지지출의 감소

- 1970년대 중반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사회복지지출은 1970년 대 후반부터 증가율의 둔화 내지 축소로 돌아섰다.
- 독일의 예를 보면 사회복지 지출은 1960년 대 GNP 대비 20.5%이던 것이 1975년에는 32.6%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1981년에는 GNP 대비 31.5%로 감소하였다.
- OECD 회원국 전체를 볼 때, 1960-1975년 기간 동안 사회복지지출 비용은 매년 8% 씩 증가하였는데, 1975년에서 1981년 기간 동안에는 이 증가율이 4%로 줄어들었다.
-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년 8%에서 4%로 둔화되었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출 증가의 주요원인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지출과 노인 의료지출의 증가인데 지출 규모의 정체가 의미하는 것은 지출 감소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1960		1975		1981	
	TS/GDP	TG/GDP	TS/GDP	TG/GDP	TS/GDP	TG/GDP
프랑스	n.s	38.8	24.2	43.1	29.4	48.5
독일	20.5	31.4	32.6	47.4	31.5	47.8
일본	8.0	17.0	14.2	26.4	17.3	30.4
이탈리아	16.8	29.9	26.0	41.6	28.9	45.0
영국	13.8	33.0	22.4	45.6	23.5	46.6
호주	10.2	22.7	18.8	32.5	18.9	31.0
벨기에	17.6	30.7	34.5	45.3	n.s	66.7
덴마크	n.s	n.s	32.4	47.6	n.s	n.s
핀란드	15.4	26.4	23.3	36.6	25.9	39.0
네덜란드	16.2	29.9	37.1	50.4	36.1	58.9
노르웨이	11.7	26.4	26.2	46.9	27.0	48.0
스웨덴	15.4	31.3	26.8	49.0	33.3	64.2
미국	10.9	28.1	20.8	36.0	20.7	35.7

〈표1〉 각국의 사회복지지출/정부지출의 추이

5) 감정기 외 (2002) 『사회복지의 역사』 참고

TS=총 사회복지, TG=총 정부지출
출처: 재인용 (복지국가론 248 표)

2) 위기의 배경

(1)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 ①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경제적 호황의 종식 ---> 스테그플레이션 지속, 고실업 문제와 인플레이션 상태가 공존
 - 거시경제지표의 악화(앞의 표) → 케인즈 이론의 한계; 케인즈 경제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국면
- ② 신흥공업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혹은 Economies)의 추격
 -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 ③ 포디즘적 생산방식 → 포스트포디즘적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
 -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기존의 생산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적응하기 힘들어짐.
 - ME(Micro-Electronic)혁명⁶⁾과 린생산방식(LEAN Production)⁷⁾
 - 노동의 유연화(flexibility) 증가: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 고용형태의 다양화

(2) 노동연대의 약화

①노조가입률

- 미국과 일본: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임금 생활자 중 노조원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 미국의 경우 1970년 31%--->1985년 18%.
- 유럽: 1970년대 노조원 비율 증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90%에 육박. 1979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

6) IC(집적회로) 등 반도체 기술의 진보에 의해 초래된 정보 혁명의 제2단계를 가리킨다. 컴퓨터의 발명과 그 이용·보급의 단계가 제1차 정보혁 명이라면 ME혁명은 제2차 정보혁명이다. 그 배경으로서는 ① 반도체 기술의 경이적 진보 ② 컴퓨터의 소형화 ③ 정보처리, 전달기술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특징은 ① OA(office automation)와 FA(factory automation)의 진전 ②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산업의 정보화 ③ 뉴미디어 등 새로운 정보수단의 등장을 들 수 있다(네이버 용어사전).

7) 1990년 미국 MIT에서 일본 도요타에서 시행중인 생산관리기법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새로운 생산관리공법 발표. 도요타자동차의 오노 에이치(생산이사)는 미국 포드 생산공장을 견학하고 디트로이트의 대량생산방식은 한 마디로 너무나 거대하고 방만한 시스템을 느낌. 콘베어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대량생산시스템은 각각 최소한의 단위공정 생산을 위한 생산, 검사, 공무, 청결 등의 “한 공정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각각 세분화하여 운영” 하며, 특히, 중간공정에서 불량 발생 되어도 마지막 공정까지 흘러간 다음 rework 또는 폐기하는 시스템으로 수정비용 발생이 막대하게 발생. 이에 도요타는 각각의 부품을 단위 조립체로 묶은 후 소속공정을 한 팀으로 만들어 단위 조립체의 책임을 각 팀에 부과함. 대량생산과 달리 각 팀장들은 직접 공정에 참여하고 지휘하며, 작업자를 교육하여 검사, 설비점검 및 간단한 기계 고장 수리, 생산량/불량관리 등을 팀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어느 팀이든 자체 공정내 불량 발생 즉시 개선/시정하여 후공정으로 넘기도록 하여, 오류수정을 위한 추가 시간 발생을 최소화. 이는 JIT(Just in time) 즉, 적기생산시스템이라고도 하며 한 마디로 “자재입고에 서부터 납품까지 각 공정별 생산 또는 작업에 따른 검사, 설비점검 등 생산자원을 제때에 행하는 것” 임. 이것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각팀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확보하려 하며,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은 성과달성에 도움이 안되므로 사라지게 되고 회사는 효율적이고 날씬하게 변화하는 것임. 자재팀은 최소재고회전을 할 것이며, 생산팀은 동시에 검사하므로 불량 이 줄고, 자동화를 추구할 것임.

② 노동계급의 파편화

-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 노동계급의 저항에 의해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노동계급은 제도의 내부로 순응·흡수되어 이른바 두비엘(Helmut Dubiel)의 ‘시민화’가 이루어졌음.
- 회사 단위의 협상으로 노조의 분절화가 이루어져 강력한 노동운동 약화. 새롭게 부상하는 공업국가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노동자의 양보가 이루어짐.

③ 조합주의의 약화와 전후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합의(consensus) 붕괴

- 노동세력의 약화는 조합주의의 중요한 주체였던 노동계급의 약화와 협상의 헤게모니가 자본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 이는 전후 합의의 붕괴를 초래함.
- 전후 완전고용, 경제성장,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의 붕괴. 사회조합주의 구도가 힘의 균형을 잃고 자본에 의해 헤게모니 장악. 케인즈 경제원리 대신 새로이 통화주의 경제원리가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과 동시에 자본은 국가의 역할과 노동계급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대의 흐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주인공으로 등장.

(3) 지구화(globalization)

① 지구화(globalization)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재함.

- 경제적 지구화는 자본흐름, 생산체계, 시장,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서의 변화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척도로서 국제무역(수출입), 해외직접투자(FDI), 국제금융, 기업합병 및 네트워크 등이 사용됨.
- 이에 비해 정치적 지구화는 지구적 맥락에서의 정치의식, 정치과정, 그리고 정치활동의 변화를 의미함. 국제기구의 활동 및 결정권 강화, EU통합 등이 정치적 지구화의 대표적 양상이라 볼 수 있음.

② 지구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 지구화는 국가, 공공정책 및 복지국가에 제한을 부과함. 즉, 국가의 능력과 정책자율성은 현대 지구경제의 ‘외적’ 힘에 의해 침식되어 왔다는 것.
- 스트리커(Stryker, 1998:8-9): 첫째, 금융 지구화는 모든 형태의 자본(국내자본과 해외자본)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 의존성을 심화시킴. 둘째, 지구화된 금융 및 생산자본은 자본 이동의 위협과 위험을 증가시킴. 셋째, 금융통합은 국민국가가 실업을 완충하기 위해 팽창적 경제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긴축재정을 추구하도록 유도(예를 들면 EU는 유로화 도입에 앞서 회원국들에게 긴축재정정책과 적자예산 편성의 지양을 권고함). 넷째, 지구경제는 제1세계 국가들에서 국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음. 마지막으로, 지구화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초국적 확산을 가속화시킴. 즉, 국가 수준에서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형성의 완전한 불능성 혹은 완고성을 강조하고, 정부로 하여금 지구경제의 구조, 작동, 혹은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요구(무역장벽의 감소 혹은 제거, 국가세금복지의 규모 혹은 비용 감소 등)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믿게끔 부추킨다는 것.
- 결국 지구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결과로 복지국가는 ‘하향’ 수렴할 것이라는 새로운 수렴이론 제시.
- 게이어(Geyer, 1998:77): “변화하는 국가환경과 상이한 정치정당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진자본주의 복지국

가는 지구화의 힘이 시장지향적 복지국가모형을 강요함으로써 점점 더 유사해질 것이다. 요컨대, 국가의 제도적 배경이나 보수적인가 사회민주적인가, 혹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는가 우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는가는 중요치 않으며, 지구화의 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순응적 복지국가 구조만이 허용될 것이다.”

- 노동이민(immigrant)의 증가: 사회보장 적용 문제

2. 복지국가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1) 복지국가 재편

- 복지국가 위기론의 이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비판
- 이들은 위기상황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음- 최소국가로의 회귀를 염두에 둔 비판
- 1980년대의 대체적 변화추이: 복지국가의 해체(dismantling)보다는 재편 (restructuring)의 길로.
- 재편의 방향: 복지국가 재편의 세 가지 길(에스핑 안데르센의 저서 “복지국가의 변화” , 인간과 복지 참고)

(1) 세 나라(영, 미, 일)에서의 변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정부 집권

① 1979년 영국의 대처 정권, 미국의 레이건⁸⁾ 정권, 일본의 나카소네 정부

② 이들 정권의 공통적 시각

- 케인즈의 유효수요 정책의 포기과 공급중심의 경제정책
- 신자유주의 이념: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 시장의 자유의 확대, 자조 및 가족에 대한 강조
- 시장에 대한 개입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본자유화,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제거(세계 완화 등)

8) Ronald Reagan(1911~2004): 영화배우 출신의 전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1981년~1989년까지 8년동안 대통령직을 역임하였다. 레이건은 1911년 신발 세일즈맨의 아들로 태어나 디슨고등학교 학생회장, 일리노이주 유레카칼리지의 학생 상원의장을 맡기도 했다. 1932년 유레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라디오 스포츠 아나운서로 일하였다. 1937년부터 1964년까지 헐리우드 2류 영화배우로 활동했다. 레이건의 첫 출연작은 ““사랑은 방송을 타고(Love Is On The Air)”“라는 영화이며 라디오 아나운서 역할이었다. 1947년 미국노동총연맹 산하 영화배우협회 회장에 선출되어 미국 영화계에서 공산주의 성향의 인물들을 축출하는 데 힘썼다. 처음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F.D.루스벨트를 지지하였으나, 1950년대 초부터 차츰 보수적 입장이 되어 공화당을 지지했다. 1962년 미국공화당에 가입하고, 1964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골드 워터에 대한 창조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었으며, 1976년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G.포드에게 패하였으나, 1980년에는 지명되어 민주당의 J.카터를 누르고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레이건은 재임시절 '강하고 풍족한 미국'을 구호로 내걸고, 보수적이고 강경한 국내외정책을 펼쳐 1984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먼데일에게 압승을 거두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조세감면과 사회복지지출을 억제한 '레이거노믹스'의 결과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초래하였고, 전략방위구상(SDD)이라는 병력 증강 작업을 추진했으며, 대외정책에서 레바논 파병 · 리비아 폭격 · 그라나다 침공 · 니카라과 반군 지원 등으로 제3세계에 위협을 주었다. 1986년 이란-콘트라사건으로 인기가 떨어지자 대소(對蘇)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 G.부시를 도와 공화당 재집권에 성공하였고, 1989년 퇴임하였다. 퇴임 후 레이건은 지난 94년 알츠하이머병(노인성치매)에 걸린 이후 알츠하이머병 증세가 심각해 캘리포니아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고 2004년 6월 폐렴 합병증으로 93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 대처리즘

일반적으로 영국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는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 혹은 정치면까지도 포함해 강력한 신념에 따른 행동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1970년대 영국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상승,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렸으며 급기야는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총리는 79년 집권하자마자 저비용·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부분에 걸친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대처리즘의 골자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으로, 이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집대성됐다.

대처 총리는 79년부터 3연임에 성공하면서 90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5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시장을 개혁했다. 84년 3월부터 1년 동안 파업으로 버틴 탄광노조를 실업률이 11%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원칙에 입각해 처리했다.

80~87년에는 공무원 수를 75만명에서 64만명으로 11만명이나 줄였고 79~89년에 국영기업 50여개를 민영화했다. 86년에는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개혁을 단행했다.(네이버 용어사전, 여유진, 사회복지발달사에서 재인용)

※ 레이저노믹스

레이저노믹스는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경제회생책으로 이른바 공급사이드경제학이라고 불리며, 경제에 단기적인 자극보다는 근 본적인 활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억제(국방비 제외)/투자촉진 세제 도입과 개인소득세 감면 등 대형 감세/규제완화/인플레이 억제형 금융정책 등이 골자이다.

이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여유진, 사회복지발달사)

2) 사회복지의 변화

(1) 복지국가 축소

① 정부들의 복지국가 축소의 논리

㉠ 복지국가와 공공영역이 사적 경제의 짐이 되고 시민의 유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들을 삭감하거나 재상품화하려고 시도함.

- 두 행정부 모두 공공부문의 총합적 규모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공공지출의 영역 중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데는 성공하였고, 결국 국가복지활동을 궁핍하게 하였음.
- 1980년 대 서구 복지국가들은 복지예산의 증가억제정책을 씀.

급여형태	변경사항	예
노령연금	퇴직연령 높임 완전연금수혜자격 기간의 증가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급여를 인상하는 근거 마련 연금의 소득심사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장애	보다 엄격한 장애(무능력) 심사 새로운 기간 제한, 급여축소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네덜란드
실업	급여기간 축소 급여수준 감소 자격 축소	벨기에, 영국, 덴마크, 미국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가족수당	실질 가치를 감소 또는 자격 축소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자료: Pierson(1998), p.254; 감정기 외(2002) 재인용)

(2) 민영화

① 사회복지의 민영화: 사회복지 관련 활동이나 자산 소유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활동⁹⁾

- 급여, 재정, 규제에서 정부 개입의 축소

② 민영화의 형태

㉠ 급여의 민영화

-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국가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거나 대체하는 활동.
- 급여 민영화의 형태 - 증서(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증 제공)-food stamp 등등.

㉡ 재정의 민영화

- 국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재정부담을 확대 ;국가복지 예산의 삭감, 의료보험의 자기부담 인상, 각종 보조금(예, 주택보조금) 삭감. (정당화의 논리: 재정 효율성의 증대, 국민의 선택의 폭 넓힘)

③ 민영화: 찬성과 반대

㉠ 민영화 찬성 논리: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주장

- 첫째, 국가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 의해 자원의 낭비적 사용을 부추김. 둘째, 복지국가는 노동과 저축에 대한 유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생산력을 위협에 빠뜨림.
-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낭비됨. 국가기관에서 개인은 사적기관에서처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공공기관 피고용자들은 사적기관에서처럼 제한에 직면하지 않음. 실제로 그들은 클라이언트를 희생하고서 그들 자신의 이해에 봉사에 전념하기 조차함.
- 경제학자들 중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다수, 주류 경제학)들은 민영화 정책 찬성
- 자유방임주의적 가치: 사회적 서비스를 민영화하는데 대한 두 가지 입장
 - 국가의 복지활동 축소를 통한 개인적 유인 강화
 - 선택의 자유를 위하여 공공영역에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시킴.

㉡ 반론

- 공적인 사회적서비스의 장점(Walker)
 - 사회적 大義, 사회통합에 유리
 - 자본주의적 착취의 완화, 부분적 재분배효과.
 - 욕구에 따른 자원의 분배.
 - 규제되고,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9) 정부재산 매각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민영화로 이해되는 반면,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전반이나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로 봄(최재성(2006)).

- 자원, 지위, 권력분배의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자본주의기업의 영향에 대한 반작용.
- 사적인 복지서비스는 단가가 비싸고, 서비스의 질이 일정치 않음.

㉔ 민영화가 갖는 함의(Walker)

- 민영화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사적영역으로의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시장원칙을 도입하고 확장하려는 것. 또한 그것은 공식적 보호와 비공식적 보호 사이의 경계를 변화시키려는 문제.
- 종전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제도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 효과 노림(예: 국민연금+ 사적연금)
- 그러나 이는 혼선과 행정의 중복문제를 야기(비효율적인 측면)

④ 영국에서의 예

㉕ 소득보장

- 급여축소(급여수준 임금의 25%-->20%), 연금 산정기준 -- 최고 소득 2년간 평균소득에서 전 생애 평균소득)
- 사적 연금의 강화: 사적 연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특혜조치 실시
- 사회부조: 주택급여의 범위 축소

㉖ 의료보장

- 외부계약의 증가: 급식, 세탁, 청소 등 보조서비스의 외부계약
- 본인부담금의 증가: 치과 진료, 약제급여, 유료병상의 증가
-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세제 혜택

㉗ 주택

- 공공주택의 대대적 매각
- 공공주택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㉘ 사회복지서비스

- 시설보호부문에서 영리기관에 우대조치
- 이용료 부담 증가
- 탈 시설화

(2) 근로 연계적 복지(Workfare)

① 근로 연계적 복지의 개념

- 급여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급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일이나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Walker,

1991, p. 1; Musgrove, 1991, p. 1).

- 전통적인 개념에서 볼 때 근로연계복지는 빈민법에서 강조한 노동을 통한 구호원칙과 맥을 같이함.
- 코스텔로(Costello, 1993)의 정의: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통용되는 시장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 자리나 현장훈련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

② 근로연계적 복지의 예

- 공공부조의 급여조건과 근로연계: 예) 미국의 TANF
- 고용보조금: 일하면서 받는 급여(in-work benefit)
- 조세지원: 저소득근로가구에 대한 역소득세, 예) 미국의 EITC
- 직업훈련, 인턴: 예) 영국 노동당 정부의 뉴딜

③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복지수급자들에게 노동동기의 유지, 복지의존성 문제의 해소 등등

(3) 재편의 결과

① 사회복지지출은 축소되지 않음: 불가역적 관점-irreversibility

② 복지국가의 중심축의 변화

- 완전고용의 종말
- 계급정치- 다원주의 정치로의 변화
- 이념의 변화: 신자유주의

③사회의 양극화 심화

-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고소득자의 조세부담 완화, 고용불안 및 임금의 불평등 심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축소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축소: 공공주택의 매각,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자격 조건 강화,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 중산층 이상 사회복지 축소되지 않음-선거정치
- 사적 복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